

디지털 취약한 어르신들 택시 잡기 ‘고통’

스마트폰·앱 낯설어 불편...빈 택시 잡으려 길가에서 1시간 허비도 광주·전남 노인 이동권 보장 위한 디지털 교육·지원 대책 등 절실

#정호웅(71·나주시 다시면)씨는 지난달 사업차 베트남에 갈 일이 생겨 광천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예약했다. 정씨는 출국 당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 자가용을 주차해둔 뒤 택시로 광천터미널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30여분 동안 택시 5대가 지나가도록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한 대조차 멈춰서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리무진 시간을 놓쳐 2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고 다음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정씨는 “요즘은 택시를 앱으로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자식이나 후배들이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법을 알려줬지만 막상 혼자 하려니 안되더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말마다 성당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 왔던 김숙영(여·89·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굳이 한 시간씩 일찍 나와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 무릎 건강이 나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물론 버스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멈춰

서지 않는 택시를 잡으려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김씨는 “2년 전만 해도 10여분만 기다리면 택시 1대 정도는 잡았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택시마다 나를 못 본건지 보고도 가버리는 건지 ‘쌍’ 지나가 버리더라”고 혀를 찼다.

광주·전남지역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U’, ‘리본택시’ 등 택시 호출 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노인들의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택시 기사들의 주된 운행 방식이 앱을 통한 ‘콜운행’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조작,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는 택시는 총 8117대(법인택시 3334대, 개인택시 4783대), 전남도는 총 6501대(법인택시 2695대, 개인택시 3806대)에 달한다.

이 중 전체 20%에 달하는 2900여대가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로 등록돼 있으며, 대략 80-90%의 택시 기사가 카카오 일반 택시 신청을 해 카카오T 앱으로 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20%의 택시 또한 U, 리본택시 등 앱을 통해 콜을 받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경우 길에서 손을 흔드는 과거 방식대로 택시를 잡으려다 허탕을 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대부분 택시들이 앱으로 콜을 받을 때만 운행하다 보니 빈 차라고 해도 ‘예약’ 불이 들어와 있는 택시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빈차’라는 표시등을 켜놓았다가도 손을 흔들면 곧바로 ‘예약’으로 변경해 지나치기도 일쑤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발급에 대한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고령층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는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광주, 전남지역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고령인구비율’은 2020년 14.2%, 2021년 14.8%, 2022년 15.6%, 올해 10월 기준 1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전남은 고령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남지역 고령인구비율은 2020년 23.5%, 2021년 24.3%, 2022년 25.2%, 2023년 10월 25.6%로 증가했다.

이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 21 사무처장은 “이미 대중교통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디지털과 훈련 프로그램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중심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만큼 디지털 환경이 빨라지는만큼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호웅 기자 zhang@kwangju.co.kr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회사 대표 징역형 선고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광주시 남구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회사에서 경리 업무 등을 보는 B(여·37)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B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 나감자 뒤에서 껴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를 접촉하기도 하고 “자금을 만지는 자리에서 일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꼬지 말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수사, 경찰 고위직으로 확대

광주지검, 전 경무관 영장 청구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경찰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코인 사기관련 사건에 개입하면서 사건 브로커 B씨(구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열린다.

이에 앞서 B씨와 결탁해 경찰 인사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남경찰청 전직 간부경찰관 C씨

도 구속됐다.

지난 7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C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에서 퇴직한 C씨는 동료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청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를 B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 경찰들과 친분을 쌓아온 ‘사건 브로커’가 고위 경찰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사건 브로커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감·경 청탁을 명목으로 18억 5000여만원을 받아 쟁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광주지역 활동가들이 3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교육관 위탁심사 문제 없다’...광주경찰, 고소 사건 각하

경찰이 5·18공법단체 두 곳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입찰 방해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5·18 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재공모에서 탈락한 5·18 부상자회와 5·18공모자회는 지난 5월 광주지검에 광주시의 입찰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 시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

다. 고소당사자들이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증거 제출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직권남용 고소건을 각하했다.

한편, 광주시는 5·18 공모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교육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3월 끝나자 두 차례 수탁 기관을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부터 교육관을 직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돈 받고 외국인 수백명 허위초청한 브로커 일당

난민신청까지 알선...7명 검거

돈을 받고 회사명의로 외국인 수백명을 초청해 난민신청까지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 2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38)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33)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51)씨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3명의 외국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 541명으로부터 총 5300여만원을 받고 입국 허가에 필요한 초청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무역업체의 명의로 너무 많은 초청장이 보내져 대사관이 통제에 나서자 이들은 D씨의 업체

명의로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청된 외국인 541명 가운데 절반인 262명에게는 실제 사증(비자)이 발급됐고, 이중 48명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초청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도 했다. 빚으로 인한 협박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해 체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p>신고 방법</p> <p>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p>처벌 사항</p> <p>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p> <p>신고 포상금</p> <p>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p>
---	---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